



주간 통일정세

2013-1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군사대치 속 양어장 찾은 까닭은(3/11, 연합뉴스)**
 - 최전방 군부대를 잇달아 방문해 호전적인 발전을 쏟아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양궁경기를 관람한 데 이어 양어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을 연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북한 매체들은 12일 김 제1위원장이 백령도 타격임무를 부여받은 월내 도방어대와 제641군부대 산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시찰하고 룡정양어장을 찾은 사실을 공개함.

- **北 각종 매체 통해 '전시태세' 강조…분위기 고조(종합)(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시점으로 공언한 11일 '전시태세'와 '전투동원태세'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조선은 지금 전시태세에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온 나라의 산과 들이 성새(성과 요새)가 되고 전호(참호)가 됐으며, 최고사령관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전시태세에 있다"고 전함.
 - 이어 "각지 당조직과 근로단체 조직에서 긴급협의회가 일제히 진행됐다"며 "단순히 협의회가 아니라 결전을 앞둔 작전회의였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군부대 예술단 공연 관람(3/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해안포병의 노래' '전사의 노래' '병사들이 영웅이 되자' '남해가 앞에 있다' '천만이 총폭탄되리라' 등의 기악과 노래 공연을 관람했다고 설명함.

- **北 '50년대 조국수호정신' 연일 강조…그 이유는(3/15, 노동신문)**
 - 최근 전쟁 분위기를 높여온 북한이 주민들에게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전함.
 - 신문은 1면에 실은 '모든 것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하여란 제목의 사설에서 "전사와 다름없는 지금 우리에게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더없이 귀중한 정신적 재보로, 고무적 힘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연평도·백령도 겨냥 포사격훈련 지도(종합2보)(3/14, 조선중앙방송)

- 한미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에 반발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를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4일 전함.
-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대연평도, 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끌어들여지는) 열점지역(세력간 충돌이 격화되는 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셨다"고 밝힘.
- 이어 "이번 훈련은 포병구분대들이 실전과 유사한 조건에서 분담된 목표에 대한 화력타격 가능성과 격파능력을 확정하며 포 무기들의 성능을 검열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목적을 뒀다"고 덧붙였다.

■ 김정은동향

- 3/12, 김정은 黨 제1비서, 3.11 백령도 인근 월내도방어대 시찰(3.12, 중통)
 - 최룡해, 김격식, 김영철, 박정천, 림광일, 안지용 동행
 - 적함선들이 군사분계선 해상수역에 접근할 때에는 위압적인 경교사격을, 침범할 때에는 강력한 조준격파 사격을 가할데 대한 새로운 해상작전규정 비준
- 3/12, 김정은 黨 제1비서, 3.11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 포병구분대 시찰(3.12, 중통)
 - 백령도의 적들이 움푹하기만 하면 괴뢰6해병여단 본부와 관하 해병대대들을 무자비한 화력타격으로 초토화할데 대한 임무 수립(동행인 동일)
 - 김정은, 용정양어장(황남 용연군/10.11.21 김정일과 既 방문) 현지 지도(3.12, 중통)
- 3/12,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3.12, 중방·중통)
 - 최룡해, 현영철, 현철해, 박정천 등 수행 관람
- 3/14, 김정은 黨 제1비서, 연평도·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3.14, 중방·평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격식, 박도춘, 리영길, 손철주, 김영철, 박정천, 림광일, 리성국, 리영래, 김명남, 안지용 동행
- 3/14, 김정은 黨 제1비서, 3.14 중국 시진핑(習近平)에게 '국가 주석·중앙군사총주석 피선(奎人代 제12기 제1차 회의)' 축전
 - 김영남도 3.14 시진핑과 장덕강(張德江, 奎人代 상무위원장 피선)에게 축전(3.14, 중통·중방)
 - 北,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2기 제1차 회의(3.3~12, 베이징 인민대학습당) 소식 보도(3.14, 중방)
- 3/14, 김정은 黨 제1비서, 미얀마·시리아·콩고·우간다 대통령의 '김정일 생일 71돌 축전'에 답전 발송(3.14,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내각총리), 청춘거리 체육촌과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현지요해(3.11,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세포등판개건전투장(강원도 세포·평강·이천군 일대)·문천시 남창협동농장·안변군 비산협동농장·문평제련소 등 현지요해(3.15,중통)

나. 경제

● 북한 무역 상인, 중국내 예금 인출(3/14, 아사히신문)

- 북한 무역 상인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뒤 중국 내 은행에 맡겨둔 자금을 잇달아 인출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북측의 북중 무역상'을 인용해 북한 무역 상인들이 이달초 안보리 결의 직후부터 중국은행, 중국교통은행 등에 맡겨뒀던 위안과 달러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함.
- 돈은 북한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며, 안보리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동결하거나 정지해야 한다'고 결의하자 계좌가 동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자금을 옮기는 것으로 보임.

● 北, 군사적 긴장 속 생산부문 성과 선전(3/17,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평안북도 향산군에 있는 희천발전소의 2단계 공사 진행 상황을 전하면서 "희천발전소 2단계 공사대 상인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이 원수 격멸의 기상 안고 위훈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함.
- 신문은 '불타는 적개심으로 증산투쟁을 힘있게'라는 글에서 "평안북도의 공장·기업소의 일꾼과 노동자가 미제와 남조선 괴뢰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일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함.

다. 군사

● 북 군사조직, 중국민당군 대응위해 창설(3/11, 연합뉴스; 한국현대사연구)

- 북한이 조선인민군의 모체인 군사조직을 창설한 것은 남한 침공이 아니라 중국 국민당군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미야모토 시토루(宮本暲) 일본 세이가쿠인(聖學院)대 교수는 한국현대사학회 학회지 '한국현대사연구' 창간호에 기고한 '북중 관계가 조선인민군 창설 과정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기함.
- 미야모토 교수는 일본 도시샤(東志社)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거쳐 고베(神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일본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



소장 학자임.

- 전투태세 돌입했다는 北전방부대서 탈영병 급증(종합)(3/12, 연합뉴스)
 -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서 탈영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군 당국이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최근 몇 달 사이 최전방 북한군 부대의 탈영자 규모를 추적한 결과 예년과 비교하면 7~8배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군과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군 최전방 부대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부대별로 훈련하면서 탈영자 색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함.
- 北, 단거리 미사일 두발 동해서 시험발사(3/15, 연합뉴스)
 - 북한이 15일 오후 동해의 공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군 소식통은 이날 "동해 지역에서 화력훈련을 하는 북한군이 KN-02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두 발 공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면서 "단거리 미사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기타 (군사)

-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3.13)】 우리 軍의 '지휘세력 응징, 정권소멸' 등 발언 거론 '군부 호전광들의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어린 치맛바람과 무관치 않다'며 '무자비한 보복만 남았다'고 위협(3.13, 중통·중방·평방)
-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이 땅에 이제 더는 정전협정의 시효도, 북남 불가침선언에 의한 구속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남은 것은 우리(北)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행동, 무자비한 보복행동뿐임.

라. 사회·문화

- 北, 태블릿PC로 TV시청...인터넷 활용도 증가(3/15,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수요 늘어나는 다블레트PC(태블릿PC)/ '국내망' 접속봉사도 시작'이라는 평양발 기사에서 최근 평양 도서관이나 식당에서 태블릿PC 사용자들을 가끔 보게 된다고 전함.
 - 태블릿PC의 '슬라이드쇼' 기능이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는 젊은 여성, 학생들도 찾아볼 수 있으며 파일 열람 및 편집 기능, 사진·동영상 녹음·녹화 기능, 음악재생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고 게임, 소설, 서적, 학습자료도 담겨 있으며 특히 가격이 180달러 수준인 조선컴퓨터중심(KCC)의 '삼지연'은 TV수신 기능도 갖고 있음.



- **북한 어린이 28% 만성 영양실조로 성장 저하(3/16, 연합뉴스)**
 - 북한 어린이 4명 중 1명꼴로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민의 3분의 2는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 어린이 28%가 영양실조로 성장 발육이 저하돼 있으며 특히 4%는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北 "전국서 1950년대 전사가요 열풍"(3/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역에서 1950년대 전사가요 열풍이 불고 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최후승리를 확신하는 군민의 노래'라는 글에서 "지금 조선(북한)의 그 어디서나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불렀던 전사가요가 힘 있게 울려 퍼지고 있다"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그것은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원수격멸의 의지를 더욱 북돋워주고 있다"고 전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美,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촉구(종합)(3/1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성명을 발표한 지 20주년이 되는 12일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20년 전과 오늘, 미국이 새겨야 할 교훈'이란 기사에서 "지난 20년간의 조미(북미) 핵대결 과정은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경제적 제재의 화살이 결국은 조선의 핵미사일로 되돌아오게 됐다는 논박할 수 없는 진실을 낳았다"라며 "미국이 오늘의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역사에 의해 여지없이 파산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걷어치우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함.
 - 통신은 "조선의 위성발사나 핵무기보유는 오직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그를 위한 담보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라며 "핵소동의 초점을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불순한 목적에 둔 미국의 야망은 실현될 수 없었고 그들의 시간 끌기로 차려진 것은 조선의 적개심과 보복능력 향상이었다"며 북핵문제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함.

- **北, 中 인민정치협상회의 소식 뒤늦게 보도(3/14, 평양방송)**
 - 최근 중국에 관한 뉴스 보도를 자제해온 북한이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



회의(정협) 소식을 뒤늦게 보도했다고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 14일 전함.

- 방송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간부가 참여한 정협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 **北 "사이버공격은 적대세력의 비열한 행위"(3/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발생한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장애 현상을 "적대세력의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함.
- 통신은 15일 논평을 통해 "우리 공화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봉사기(인터넷서버)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집요한 비루스(바이러스) 공격이 연일 감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조선의 초강경조치들에 질겁한 적대세력들의 너절하고 비열한 행위로 단정한다"고 밝힘.
- 논평은 이어 "이런 사이버공격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리졸브' 합동군사연습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반공화국 압살책동의 일환인 적들의 사이버공격이 극히 무모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른 데 대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평양 주재 유엔 기구, 지방 방문 중단(3/15, 러시아의 소리)**

- 15일 러시아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의 평양 특파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던 유엔 기구들이 북한 내 지방 방문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유엔 기구들의 이런 결정은 북한이 지난달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나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라고 방송이 설명함.

● **北 '50년대 조국수호정신' 연일 강조...그 이유는(3/15,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1면에 실은 '모든 것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하여'란 제목의 사설에서 "전시와 다름없는 지금 우리에게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더없이 귀중한 정신적 재보로, 고무적 힘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함.
- 사설은 "자기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 제국주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사생결단의 의지,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불굴의 희생성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를 안아왔다"고 주장함.
- 또한 "'조국의 존토를 피로써 사수하자'는 것이 1950년대 투쟁정신이다"라며 "1950년대에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면 오늘의 전면대결전을 통해 미제를 지구 상에서 영영 매장해버릴 각오와 배짱을 가져야 한다"고 밝힘.

● **中 새 지도부에 잇단 축전...갈등 봉합 목적?(3/17, 조선중앙통신)**

- 1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영림 내각총리는 중국 전국인민대



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로 선출된 리커창(李克強)에게 16일 축전을 보냄.

- 최 총리는 축전에서 "중국인민이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과 나라의 종합적 국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며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가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계속 공고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같은 날 박의춘 외무상도 중국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왕이(王毅)에게 축전을 발송함.

● 北, 새 교황 프란치스코에 축전(3/17, 조선중앙통신)

- 장재언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바티칸 교황청에 보낸 축전에서 "나는 주님의 은총과 가톨릭 교회의 두터운 신뢰 속에 베르골리오 추기경께서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고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 최근 '北 인터넷 봉사기지들에 바이러스 공격이 연일 감행되고 있다'고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의 '사이버공격' 제기 및 '미국과 추종세력들 책임' 왜곡 주장(3.15, 중통/너절하고 비열한 행위)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3.9), 3.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3-141호로 배포(3.16, 중통·평방)

나. 6자회담(북핵)

● 노동신문 "美, 대북적대정책 수정해야"(3/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미국에 대해 강경한 대북 적대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섬.
- 이 신문은 '자주권 수호에 펼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핵 선제타격정책,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미국에는 오직 그 길밖에 없다"고 밝힘.
- 또 "이제라도 침략적인 핵 전쟁연습들을 당장 중지하는 것과 함께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한데 대해 당장 사죄해야 한다"며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반기문 UN사무총장 비난..."우리 험담 일삼아"(3/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을 감싸면서 북한에 대한 험담을 일삼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반기문은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시험(핵실험)을 결코 들면서 고약한 소리를 하였는가 하면 미국의 북침 핵전쟁 연습까지 사사건건 두둔해 나섰다"고 밝힘.
- 이어 "이것은 그가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의 초보적인 활동원칙도 망각하고 유엔 성원국(회원국)인 주권국가를 반대하는 적대세력의 고립압살 책동에 공개적으로 편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그 직분에 맞게 우선 자기 사업에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함.

● 北 외무성 "핵보유, 경제적 흥정물 아니다"(종합)(3/16, 연합뉴스)

- 북한은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지구상 어디에 있던 징벌하는 것이 우리 핵보유의 유일한 목적"이라며 "우리가 그 무슨 경제적 혜택과 바꿔먹기 위한 흥정물로 핵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오산"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또 "다른 길을 택하면 도와주겠다는 미국의 서퍽 찌리 유혹이 다른 나라 들에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개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며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줄줄이 나서 우리를 핵보유로 떠민 저들의 책임을 가리우고 마치 우리의 핵보유 때문에 정세가 격화될 듯 사태를 왜곡하는 녀두리를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밝힘.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오늘부터 정전협정 백지화...최후결전의 시각"(3/11,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11일 예고한 대로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이날 '천만군민이 떨쳐나 우리의 힘, 우리의 식으로 반미대결전을 전민항쟁으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후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3월11일, 바로 오늘부터 이 땅에서 간신히 존재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됐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밝힘.
-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음모와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함.



- **北,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개성공단은 정상 출입경(종합)(3/11, 연합뉴스)**

 - 북한이 예고대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간 직통전화를 11일 차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9시 우리 측 연락관이 북측 연락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이 받지 않았다"고 전함.
 - 남북 연락관들은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께 업무개시 통화를, 오후 4시께 업무마감 통화를 해옴.

- **北 "키 리졸브 시작...과국적 결과 韓·美 책임"(종합)(3/1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낸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둬드는 경고에도 끝끝내 도발적인 북침전쟁 불장난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성격과 규모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가장 노골적인 도발행위"라고 주장함.
 - 성명은 "미국과 괴뢰 군부 깡패들이 우리의 최후통첩에 무모한 전쟁 불장난으로 도전해 나섬으로써 최소한의 전쟁억제 장치였던 정전협정과 불가침 합의들은 전면 폐기되게 됐으며 전쟁을 막을 제동장치가 완전히 풀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이제 사정없이 전쟁폭발의 길로 질주하게 됐다"고 강조함.

- **北, 차대통령 겨냥 "독기어린 치맛바람" 비난(종합)(3/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사흘째인 13일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광기어린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어린 치맛바람과 무관치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간접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함.
 -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우리 국방부 해당)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군 관계자들의 '지휘세력 응징' '북한 정권 소멸'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힘.
 - 담화는 "청와대 안방에서는 그 무슨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청을 둔구면서 '무기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느니,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하는 나라는 자멸할 것'이라느니 하는 극히 상서롭지 못한 악담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함.

- **北 "당사자 아닌 남한, 정전협정 말할 자격없다"(3/1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정전협정의 일방적인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한 정부는 "정전협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1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함.
 - 신문은 이날 "괴뢰들이 정전협정 완전백지화를 선언한 우리의 정당한



조치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걸고 드는 것은 미국의 식민지전쟁 하수인들의 주재념은 망동"이라고 밝힘.

- 신문은 "미국의 식민지 전쟁하수인이 돼 조선반도정세를 전면전쟁의 위기 속에 몰아넣은 괴뢰들은 현 사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나발질할 꼬물만한 체면도 없다"며 "더우기 남조선 괴뢰들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도 아니다"라고 지적함.

● 北, 주한미군 범죄 비난..."이 땅에서 미군 몰아내야"(3/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3일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함.
- 통신은 이날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주한 미군들이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을 거론하며 "남조선 인민들은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친미사대 매국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군에 의해 빚어지는 흉악사건들은 극도의 민족멸시 사상과 오만, 강권이 낳은 극악한 범죄행위"라며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는 미군의 남조선 강점의 필연적 산물로, 피할 수 없는 항시적 현상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정전협정, 일방이 지키지 않으면 자동 백지화"(3/14,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4일 정전협정은 협정 체결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다른 협정들과 달리 정전협정은 특성상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할 성격의 협정이 아니며 어느 일방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밝힘.

● 北, 정홍원 총리에 "첫 별초대상될 것" 위협(3/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연평도를 찾아 우리 군에 북한 도발에 확실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망언' '특대형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첫 별초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함.
- 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백두산천출위인(김정은)의 연이은 현지시찰과 멸적의 불벼락 선언에 넋을 잃은 자들이 함부로 헛바닥을 놀리며 목숨 건 도박에 나선 것"이라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 특대형 도발로서 결코 스쳐지날 수 없다"고 주장함.
- 또 "진짜 전쟁 맛, 불맛을 모르는 이상화와 같은 해병대 나부랭이와 괴뢰법조계와 민간회사를 오가며 돈벌이나 해먹던 정홍원 따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입질(입을 놀리는 것)하는 것을 보면 얼빠진 자들의 발악적 추태가 분명하다"며 "이상화, 정홍원과 같은 반역자들은 다가올 조국통일대전에서 우리의 첫째가는 별초대상으로 지정됐음을 숨기지 않는다"고 위협함.



- **北매체 "서해 5도 주민 피난가는 게 상책" 위협(3/17,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지구에 사는 주민은 피난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위협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글에서 "불벼락이 쏟아질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멀리 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또한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 합의 무효화 등을 거론하며 "호전광들이 전쟁연습장에서 산생(생산)한 우발적인 한점의 불꽃도 순간에 전쟁의 불길로 번지게 될 것"이라며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일대 주민이 입게 될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긴장고조속 개성공단 출입경 '정상'(3/11, 연합뉴스; 통일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불가침 합의 폐기의 발효를 예고한 11일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관계자 340명이 이날 오전 8시 30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다고 밝힘.
 - 북측은 이날 통행에 앞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출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옴.
- **北, 금강산관광특구사업 세금 부과 규정 제정(3/17, 연합뉴스)**
 - 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부문 법규집'(2012년 11월 발행)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을 채택함.
 - 이 세금규정은 적용 대상과 관련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된다"며 외국인, 남측 및 해외동포와 이들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명시함.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유엔 "정전협정은 유효" 거듭 강조>(3/12, 연합뉴스)

-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전 협정은 계속 유효하며 발효 중"이라고 말했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정전협정 조항은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면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 협정의 유효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반 총장은 지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담은 결의를 채택한 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협정의 법적 효력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네시르키 대변인은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라면서 반 총장이 북한에 협정 조항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 한편, 북한은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관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中, 한반도 정세 관련해 "당사국들 냉정함 유지해야">(3/12, 인민일보)

-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1일 현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며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당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한미 연례합동군사훈련이 11일 시작된 가운데 조선 측은 11일부터 '정전협정을 철폐하고 최후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현 한반도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을 던졌음.
- 이에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 측은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 현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냉정한 자세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영구적 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호소한다"며 "중국은 관련 당사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길 원한다"고 전했다.

나. 미·북 관계

● <미국, 북한의 '정전협정파기' 발언 반박...새 제재안 발표>(3/11, LATimes)

- 오바마 행정부는 월요일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내놓으면서 1953년 휴전



- 이래 지속되어온 정전협정의 "완전한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을 겨냥해 직접적인 경고를 했음.
-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서 60년간 지속되어온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위협했음. 북한은 남북한 간 예상치 못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남북 핫라인을 차단하고, 월요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 훈련'을 맹비난했음.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은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의 무기감축 약속을 받아내는 등의 과거 정권의 방식으로 쉽게 긴장완화를 모색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음. 토마스 도널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욕에서 개최된 아시아소사이어티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위협에 굴복하거나 실효성 없는 약속을 대가로 거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힘.
 - 도널런은 또 조선무역은행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동원해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 제재안을 발표했다고 말했음. 도널런은 또한 이란의 무기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미국은 금지된 무기기술의 어떠한 이전도 미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은 결과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음.
 - 북한이 정전협정에 대한 무력화시도를 통해 이미 한국을 위협한 바 있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북한이 위협의 수위를 고조시키는 것 자체가 한국에 곧 도발할 것이라는 신호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북한은 지난 12월 12일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해 지난주 맹비난 한 바 있음. 이에 안보리는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비행기와 선박에 대한 검색 필요성을 강조했음.
 - 한국의 새 지도자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첫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하였음. 그는 또 한국정부가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급
 - 워싱턴 국제전략연구센터의 빅터 차는 북한이 1992년부터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 취임식으로부터 수주내 국지적인 군사행동을 승인한 바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곧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은 2월 25일이었음.
 -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차관보였던 크리스토퍼 힐은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주로 북한 내 민심을 달래고 김정은의 지위를 강화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행동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평소와 달리 강하게 비난하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반항의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는 또 덴버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몇 가지 징후가 보이긴 하지만, 이를 임박한 도발의 징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北 "키 리졸브 시작...과국적 결과 韓·美 책임">(3/12, 연합뉴스)
 - 북한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됐음을 지적하면서 "이 시 각부터 초래될 모든 과국적 후과(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인 미국과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낸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둬되는 경고에도 끝끝내 도발적인 북침전쟁 불장난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성격과 규모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가장 노골적인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 성명은 "미국과 괴뢰 군부 깡패들이 우리의 최후통첩에 무모한 전쟁 불장난으로 도전해 나섬으로써 최소한의 전쟁억제 장치였던 정전협정과 불가침 합의들은 전면 폐기되게 됐으며 전쟁을 막을 제동장치가 완전히 풀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이제 사정없이 전쟁폭발의 길로 질주하게 됐다"고 강조
 - 이어 "전면 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는 우리(북한)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괴뢰 역적 패당이 우리의 신성한 땅과 바다, 하늘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침략의 아성과 본거지를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벌초해버릴 것이며 조국통일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했음.
 -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포부 활동도 전면 중단하며 임의의 시기와 임의의 대상에 정밀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또 8일에는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음.
 - 한편, 한미는 11일 시작한 KR 연습에는 한국군 1만여 명, 미군 3천500여 명뿐 아니라 F-22 스텔스 전투기, B-52 전략폭격기, 9천750t급 이지스 구축함 2척 등 미군 전력도 훈련에 참가시켰음.

- <노동신문 "美, 대북적대정책 수정해야">(3/12,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미국에 대해 강경한 대북 적대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자주권 수호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핵 선제타격정책,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미국에는 오직 그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 또 "이제라도 침략적인 핵 전쟁연습들을 당장 중지하는 것과 함께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한데 대해 당장 사죄해야 한다"며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논설은 "우리는 조선반도 정세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계속 침략적, 패권주의적 대외정책의 희생물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파



멸의 길로 몰아가는 자살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음.

- 이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제정신을 잃고 우리를 해치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그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치 않는다"고 덧붙였음.

● <미국 "북한 주먹 풀고 노선 수정하면 협상용의">(3/12,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만 취한다면 '진정한 협상'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음.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의에 참석 "오바마 대통령은 불끈 쥔 주먹을 푸는 이들에겐 손을 내민다"고 밝혔음.
- 백악관이 배포한 원고에 따르면, 도널런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에 의심을 품는 자가 있다면 버마(미얀마)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미국의 용서와 새로운 관계 구축의 증거로 미얀마를 눈여겨볼 것을 북한에 당부한 것임.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양곤을 방문한 것은 적대적으로 낙인찍힌 관계도 위대한 협력의 관계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버마는 이미 엄청난 금액의 부채를 탕감 받았으며 대규모 개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버마는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립을 탈피하고 문호를 개방했다"고 예를 들었음. 이어 도널런 보좌관은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정한 협상에 응할 태도가 돼 있다고 제시했음.
- 그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우리는 북한이 기존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를 통해 진지함만을 입증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임. 도널런 보좌관은 "북한의 핵 보유를 수용할 수도 없고 핵미사일 개발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음. 또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핵무장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도 않겠다고 말했음.
- 그는 아울러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한 북한의 외국환 거래 은행인 조선대외무역은행을 추가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 그는 중국이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이웃국가를 위협하는 북한과 평상시처럼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음.



● <미국, 도발 위협 북한에 '전방위 압박'>(3/12,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위협에 대응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 미국은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이어 각종 매체를 통해 전시태세와 전투동원태세를 강조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한반도는 물론,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판단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음.
- 특히, 미국은 한반도 인근에서 한미 양국군이 참가하는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훈련을 병행하면서 무력시위에 나서는 동시에 북한의 금융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음. 백악관과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호전적인 언사와 위협을 우려한다"면서 "북한은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카니 대변인은 그러면서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하라는 바람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북한이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무효화를 선언한 정전협정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음. 그는 "정전협정은 지난 6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왔다"면서 "상호 합의한 정전협정에 대해 특정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북한의 발표에 유감을 표시
-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핵무장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도 않겠다"고 경고했음.
- 이와 함께 재무부는 이날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선무역은행(FTB)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 '돈줄 죄기'에 나섰다. 또 국무부는 박도춘 북한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음. 이들이 모두 기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명단에도 추가함으로써 모든 압박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셈임.
-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당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제재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 이런 가운데 미군은 이달 초부터 진행해온 독수리 연습에 이어 이날부터 키리졸브 훈련에 돌입,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에 나섰다.
- 한미 양국 국방부는 이들 군사훈련이 연례적인 방어 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군 3천여 명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에 대한 '응징 결의'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실제로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키리졸브 연습은 한미 양국군의 전투태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연습"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합참이 처음으로 연합 연습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DNI국장 "북한 핵미사일, 심각한 위협">(3/13, 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이 미국과 동아시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변덕스럽고 호전적인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음. 클래퍼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호전적 수사가 선전적 성격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할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 아울러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확산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클래퍼 국장은 특히 북한의 지난달 3차 핵실험과 지난해 4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무기를 공개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동아시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음. 또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에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부품을 수출하고 지난 2007년 파괴된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지원한 사례는 북한의 확산활동 실태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6자회담 등에서 핵물질과 기술 등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핵 기술을 다시 수출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미 연합군이 더 강력한 전력으로 맞서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군은 사전경고 없이 제한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음. 그러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예로 들었음.
-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입장을 정보기관이 판단해볼 때 그들의 핵능력은 억제와 국제적 존엄, 협박적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북한 지도부가 부족한 재래식 군사력을 상쇄하기 위해 핵능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임. 그는 이어 "북한정권은 생존의 위협을 감지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그런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미국으로서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음.
- 그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 어떤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한 뒤 "미국은 평양의 핵(무기와 관련된) 독트린이나 전개 개념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음. 그는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김정은이 권력을 빨리 공고화했다"면서 "경제개선을 위해 집중했지만 아직 경제개혁의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 로버트 물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미국에 대한 현재 및 미래 안



- 보위협'을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동향, 테러리즘과 사이버 대량살상무기, 중동 동향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 클래퍼 국장은 알 카에다의 세력이 최근 크게 약화돼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에 '대규모' 테러공격을 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 오사마 빈 라덴을 포함한 알 카에다 수뇌부가 사살되거나 검거된 이후 알 카에다 세력이 조직적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그는 또 연방예산을 감축하는 기초 속에 국방예산이 크게 깎이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미국, 北미사일 대비 요격미사일 추가배치>(3/16,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서부 해안 미사일방어망에 요격미사일 14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음.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포트그리리 기지 등에 2017년까지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 14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
- 그는 "북한은 지난달 3차 핵실험을 했다고 밝혔고 지난해 4월에는 이동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여줬다. 또 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리려고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과시했다"고 지적했음.
- 북한은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KN-08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음. 이 미사일은 바퀴 16개짜리 특수 제작 차량의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돌아다니면서 첩보위성이나 레이더 탐지의 사각지역에서 발사할 수 있어 선제타격이 쉽지 않음. 헤이글 장관은 이어 북한에서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TRY-2 레이더)을 일본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 발사용 스탠더드미사일(SM)-3 프로그램도 개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최근 북한의 호전적 행태와 한반도 긴장 상황 등을 감안해 고강도의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요격 체제는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이미 배치된 현재 미사일 30기 수준에서 50% 증대됐음. 특히 추가 배치되는 14기의 요격미사일로 장거리 미사일 격추 능력이 한층 강화됐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2004년 구축됐음.
- 이에 앞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2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이 미국과 동아시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호전적인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음. 그는 당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정책에 대해 "북한 또는 이란이 장차 갖추게 될지 모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능력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상 발사 요



격 미사일과 '역량강화2미사일(CE-2)' 등의 성능 개량 실험에 최근 성공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어떤 탄도 미사일 공격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은 지난 1월27일 캘리포니아주 중부 해안에서 미사일 요격 로켓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미사일방어청에 따르면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3단계 추진체를 장착한 GBI를 쏘아 올렸으며, 그 결과 우주공간에 도달해 미리 계획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특히 IC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됐고 모든 부속품도 설계된 대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당시 GBI 발사는 2010년 12월 요격 시험 발사에 실패한 뒤 처음 실시한 것이었음.
- 미사일방어청은 발사 결과를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이나 외기권 파괴 비행체(EKV)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 미국은 당시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것이라고 직접 밝히지 않았음.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MD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도 MD체계에 참여해줄 것을 내심 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독자적인 MD체계를 강조하고 있음. 미국의 MD 구축에 대해 중국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北 외무성 "핵보유, 경제적 흥정물 아니다">(3/16, 연합뉴스)

- 북한은 16일 제3차 핵실험을 비난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우리가 경제적 혜택과 바꿀만한 흥정물로 핵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길을 택하면 도와주겠다는 미국의 서퍽 짜리 유혹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개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거칠게 미국을 비난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줄줄이 나서 우리를 핵보유로 떠민 저들의 책임을 가리우고 마치 우리의 핵보유 때문에 정세가 격화된 듯 사태를 왜곡하는 넉두리를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북한이 현재 노선을 수정하면 미국도 기꺼이 도와줄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미국 정부 측 제안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됨.
-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의에 참석,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만 취한다면 '진정한 협상'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음. 또 "오바마 대통령은 불끈 쥐 주먹을 푸는 이들에겐 손을 내민다"며 버마는 이미 엄청난 금액의 부채를 탕감받았으며 대규모 개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신규 투자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음.
-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결국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날날이 드러났다"며 "(미국 측 주장은)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이라고 비난. 이어 핵무기는 '자주



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우리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자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그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

- 답화는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지구 상 어디에 있던 징벌하는 것이 우리 핵보유의 유일한 목적"이라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으며 우리가 정한 선군의 항로를 끝까지 곧바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북한에 자제 거듭 요구>(3/11, 연합뉴스)

- 중국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거듭 자제를 촉구했음.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1일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당사국들에 냉정과 자제를 요구한다"고 밝혔음.
- 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이 같이 말했음.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수호는 국제 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정세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강조
- 화 대변인은 이어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는 가운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견해도 거듭해 피력

● <北, 국제사회 맹비난에도 중·러 공격은 '자제'>(3/11, 연합뉴스)

- 지난 1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뒤 이른바 '대국'들을 싸잡아 비난했던 북한이 이번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자극할만한 표현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고 있음.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점차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편'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유엔 안보리가 도용된 추악한 산물"이라며 미국과 함께 안보리를 강하게 비난했음.
- 노동신문도 11일 "유엔 안보리는 핵전쟁광신자들의 위험천만한 책동을 규탄하고 배격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대신 자기의 권능과 정반대로 '유일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핵전쟁책동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주장. 그러나 지난 1월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이번에도 역시 대북제재에 반대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두 나라를 간접적으로 비난한 문구도 찾아보기 어려



음. 이는 지난 1월23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직후 '대국책임론'을 부각하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

- 북한은 1월24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눌리워 지켜야 할 초보적인 원칙도 서슴없이 꺾버렸다"고 맹비난했음. 다음날에도 국방위 성명에 대한 석탄공업성 부상의 반향을 통해 "그 무슨 대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까지도 온 세계가 인정하는 제국주의 원흉이고 세계인류의 주되는 적인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공감하면서 머리를 조아댄다"고 비아냥거렸음.
- 특히,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4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대국이 미국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주장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한 바 있음.
- 북한의 달라진 태도는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구도 속에서 우방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중국 등에서 대북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지난달 초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는 시민의 소규모 시위가 잇따랐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일탈행위'를 더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임.

● <북한 무역상인, 중국내 예금 인출>(3/14, 연합뉴스)

- 북한 무역 상인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뒤 중국 내 은행에 맡겨둔 자금을 잇달아 인출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복수의 북중 무역상'을 인용해 북한 무역 상인들이 이달초 안보리 결의 직후부터 중국은행, 중국교통은행 등에 맡겨뒀던 위안과 달러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 돈은 북한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 안보리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동결하거나 정지해야 한다고 결의하자 계좌가 동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자금을 옮기는 것으로 보임.
- 신문은 개인의 인출 금액은 수십만 위안(수천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했음. 아사히신문은 또 김정일 정권 시대에 중국 내 북한 무역 상인이 베이징에 약 1천명, 상하이에 약 600명, 지방 거점 도시에 100~200명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전인대 폐막 후 북중 관계 변화 여부에 촉각>(3/15, 연합뉴스)

-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7일 폐막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가 본격적인 항해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북한과 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쏠림. 일각에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13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언급한 게 향후 북중 관계



- 의 '굴곡'을 예상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옴.
- 근래 중국과 북한 간에 수개월째 지속되는 '냉기류'도 양국 관계 변화를 점칠 수 있는 조짐이라는 분석도 있음. 무엇보다 작년 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그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87호, 그리고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안보리의 대북제재 2094호 채택으로 이어져 온 긴장 국면 속에서 중국이 북한과 일정 거리를 뒀으로써 이런 기류가 관계 재정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실제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2094호에 '동참'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대북 통관을 강화하고 은행권을 통해 북한의 돈줄에 장애를 주고 나서 예전과는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북한은 대단히 불쾌하게 중국을 대하는 모양새.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수개월째 중국 지도부의 동정은 물론 주요 동향에 대해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데서도 그런 기색이 엿보임. 북중 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 모두 상대에게 불만을 느끼고 있어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관계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이 때문에 서울 외교가에선 전인대 폐막 이후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북중 양국은 자국 내에서 당(黨) 대회를 포함해 중요한 정치 행사를 하고 나면 통상 상대국에 노동당 또는 공산당의 부장급 인사를 특사로 보내 설명해왔음. 이는 북중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례대로라면 적어도 이달 중에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의 공산당 고위층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김정일 제1국방위원장을 만나야 함. 아울러 특사 파견이 성사되면 당·정(政)·군(軍) 권력을 거머쥔 시진핑이 출범 2년째를 맞는 김정은 체제와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작금의 정세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개월째 지속해온 냉기류 속에서 중국이 특사 파견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북한 역시 덤석 특사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 중국 내부에서 반(反) 북한 정서가 부쩍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시진핑 체제의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옴.
 - 아울러 시진핑 체제가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전략적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대두. 오바마 미 행정부가 수년째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펴고 미일 동맹, 미국과 호주·인도·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과의 연대 강화로 중국의 입지를 좁히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 재조정을 미중 관계 개선의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임.
 - 다시 말해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북핵 문제를 놓고 '협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임. 실제 마틴 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미군 고위층으로선 2011년 7월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이후 1년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음 달 방중하기로 한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임.
 - 한편, 다른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의 반발을 무릅쓰고 적어도 단기적으로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등과 관련해 태도 변화를 보이고 6자회담 재개에 의지를 보이면 대북 제재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예상했음.

- <北, 中 새 지도부에 잇단 축전...갈등 봉합 목적(?)>(3/17, 연합뉴스)
 -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놓고 북-중간 갈등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가 최근 정식 출범한 중국 새 지도부에 잇따라 축전을 발송해 배경이 주목됨. 1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영림 내각총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로 선출된 리커창(李克强)에게 16일 축전을 보냈음.
 - 최 총리는 축전에서 "중국인민이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과 나라의 종합적 국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며 전통적인 조종친선협조관계가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계속 공고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같은 날 박의춘 외무상도 중국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왕이(王毅)에게 축전을 발송
 - 이에 앞서 지난 1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중국 국가주석과 전인대 상무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된 시진핑(習近平)과 장덕장(張德江)에게 축전을 보냈음. 북한 지도부가 중국 측에 축전을 보낸 것은 지난해 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중 간 갈등설이 불거진 이후 처음 있는 일
 - 특히 지난해 말 시진핑이 김 제1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지만 김 제1위원장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 북한 주요 매체들도 수개월 이상 중국의 정치 소식을 보도하지 않아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데 대해 북한이 노골적인 불만을 품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왔음.
 - 북한이 중국 새 지도부의 정식 출범을 맞아 본격적인 '서신왕래'를 재개한 것은 핵실험 등으로 불거진 북중 간 불협화음을 무마하고 앞으로 추진할 김정은의 방중 등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됨.

라. 일·북 관계

-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 설치안 21일 가결될 듯”>(3/15, 연합뉴스)
 - 유엔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이 21일 가결될 전망이다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복수의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13일 유엔 인권위원회(UNHRC) 참가국에 대북 인권 결의문 문안이 배포됐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대북 인권조사위는 3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며 활동기간은 1년임. 오는 9월 중간 조사결과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1년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
 - 조사위는 북한의 정치범 강제수용소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조사함. 유엔은 지금까지 전문가 1명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을 뿐이지만 조사위를 설치할 경우 예산이 확충되고 상임 직원이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됨. 북한 인권 조사위 설립 논의는 유럽연



합(EU)이 주도했고, 일본이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박대통령 5월 상순 미국방문…北도발 긴밀대응 모색>(3/12,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상순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2일 공식 발표했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5월 상순 방미를 염두에 두고 한미 간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음.
 - 윤 대변인은 "작년 12월 대선 직후인 12월20일 양국 정상은 전화 통화를 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며 "지난 2월 톰 도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취임식 경축사 절로 방한한 계기에 박 대통령이 5월 중 방미해주기를 바란다는 초청 의사를 전달해온 바 있다"고 말했음.
 - 윤 대변인은 "이번 미국 방문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방문이 될 것이며 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미 관련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박 대통령은 첫 해외방문지로 택한 미국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선언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모색할 전망이다. 또 위기상황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대화 국면에 대비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개와 6자회담 등 대화 틀의 복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 두 정상은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발전방안과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회수 등 한미 간 현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도널런 국가안보보좌관도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의에 참석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미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으며 박 대통령의 5월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 <미란티스 USTR부대표 "TPP협상 한국 참여 당연한 일">(3/12, 연합뉴스)
 - 드미트리우스 미란티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12일(현지시간) 자국이 강하게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에서 한국을 당연하고도 잠재적인 참여 후보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음. 태평양과 대서양을 아우르는 무역 체제를 밀어붙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한국의 협상 참여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 그는 적절한 시점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점도



시사했음.

- 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나 한국의 미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는 등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있어 '윈윈(win-win) 게임'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론 커크 USTR 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사실상 미국 무역 정책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하는 마란티스 부대표는 한미 FTA 시행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마란티스 부대표는 "한·미 FTA의 높은 수준으로 미뤄볼 때 한국은 TPP 협상의 당연하면서도 잠재적인 참여 후보국"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상태임.
-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방미 때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르면 15일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문 기구인 수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TPP 협상 및 유럽연합(EU)과의 FTA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친명한 바 있음. 마란티스 부대표는 그러면서 "참여 여부는 개별 국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전제했음.
- 또 한·미 FTA 이행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커지는 등 자국에 일반적으로 불리하다는 의회나 시민단체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음. 그는 "FTA와 직접 연관이 없는 가뭄과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옥수수과 석탄 수출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2.5% 늘었다. 자동차 수출이 48%나 늘었고 화학제품 및 농산물 수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홍미롭게도' 한국의 대 미국 농산물 수출이 14%나 늘어나는 등 양국이 상호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기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문제는 FTA와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협의 조항(consultation provision)'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월 말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의 연합뉴스 인터뷰 답변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우리나라를 상대로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 당시 커틀러 대표보는 "이 합의에 협의 조항이란 게 있다. 미국은 아직 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조항을 쓰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협상 초반에 제기된 광우병 우려 때문에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지만 개방 수준과 관련해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협의에 응해야 함. 마란티스 부대표는 지난해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됐고 아직 FTA 쟁점으로 남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서는 한국 측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 그는 "FTA에 따라 설립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이슈 등을 다룰 것"이라고 부연했음.
- 마란티스 부대표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FTA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양국 중소기업이 FTA로 어떤 이익을 거뒀는지 파악해 다른 기업을 돕자는 취지에서 양국이 각각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



-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조직 범정부 TF로 확대>(3/14, 연합뉴스)
 - 만료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촉박한 협상 시한에도 핵심 사안에 대해 한미가 큰 견해차를 보이는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현재는 별도 전담 인력없이 임무부여 형식으로 외교부 직원이 수석대표 및 차석대표를 각각 겸직하고 있다"면서 "외교부 내 전담 인력 및 타부처 인력 협조가 필요하고 한시적으로 조직을 꾸리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 앞서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에너지자원대사가 협상대표도 맡고 있는 데 새로운 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이뤄진 것을 들여다보면서 진전된 논의가 되도록 (미측과) 심층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외교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원자력협정 협상조직 확대문제를 협의하고 있음. 현재 외교부에는 국제기구국 소속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지만 외교부 장관이 임무부여를 해서 만든 것으로 정식 조직은 아님. 인원도 서기관급 이상의 인력은 협상대표·차석대표를 포함해 3명에 불과.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대표는 박노벽 에너지자원대사가, TF팀장인 차석대표는 김건 장관보좌관이 겸임하고 있음.
 - 외교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 인원까지 포함한 한시 조직 신설을 행안부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직 확대는 개정 협정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
 - 한미 양국은 2010년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문제 등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미국의 의회 비준 일정을 감안하면 협상을 올 상반기에는 끝내야 하는 상황임. 정부 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5월 전후로 개정 협상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음.
 - 정부는 한미 간 입장차를 감안, 협정 만료시한을 내년 3월에서 1~2년 정도 연기한 뒤 개정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는 이번 조직 정비를 장기전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음.
 - 원자력협정은 청와대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외교부 내 범정부 TF가 협상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셈임.
- <카터 美 국방부 장관 18일 방한>(3/15,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18일 방한, 우리 측과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국방부가 15일 밝혔다. 카터 장관은 방한 기간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면담하고 외교·국방부 장관 등도 만날 예정



- 국방부는 "카터 부장관의 방한은 새로 구성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관계자들과 정책 공조를 다지고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이에 대한 동맹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카터 부장관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최근 연기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해 연합전투참모단(일명 '미니 연합사') 구성방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권 전환 전까지 보완될 미군 전력 전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대미, 대남 위협과 관련한 의도를 평가하고 공동대응 방안에 관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임. 카터 부장관은 한국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약식 기자회견도 할 예정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카터 부장관이 기자회견을 강하게 희망했다"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위협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도 카터 부장관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순방은 광범위한 안보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아시아지역 동맹국 등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케리 美국무 "한미동맹, 어느 때보다 더 강력">(3/16,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고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케리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추진에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다"고 재확인한 뒤 "앞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 간 협조 관계를 토대로 북한 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긴밀히 협력해나가자"면서 "케리 장관의 4월 방문과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방미를 계기로 앞으로 4년간 양국 정부가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전략의 틀을 만들자"고 밝혔다.
 - 이어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아시아를 더욱 중시하는 시점에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면서 "박 대통령 방미 시 60년이 된 한미동맹의 미래와 아시아·태평양 문제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 등 조야와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케리 장관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에 역할을 한 것을 평가했으며 윤 장관은 유엔 결의 이행과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뜻을 밝혔다. 케리 장관은 또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한 요격미사일 추가배치 계획을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발표했다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태세를 일층 강화함으로써



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음.

- 한편, 케리 장관은 5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윤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줄 것을 제의. 그는 다음 달 10~11일 영국에서 열리는 G8(주요 8개국) 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중국·일본 3국을 순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윤 장관의 방미가 성사되면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외교장관이 두 차례 만나게 됨. 외교부 관계자는 "윤 장관의 방미가 언제 가능할지는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음. 이날 통화는 미국의 요청으로 10분 가량 진행

나. 한·중 관계

● <중국 외교부, 주중 한국대사 불러 '냉정 대응' 촉구>(3/11, 연합뉴스)

-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이 11일 시작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이규형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측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음.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이 대사를 만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 이후의 한반도 정세 전개에 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국 측이 인내심을 갖고 냉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음.
- 우 특별대표는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돌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등 유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사는 북한이 반발하는 '키 리졸브'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정례 지휘소 연습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 가능성은 열어 두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설명. 이 대사는 또한 새로 채택된 2094호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실천의 중요성을 중국 측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복수의 베이징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기 전날인 지난달 11일 늦은 오후 이 대사를 긴급히 불러 북한 측이 조만간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해왔다는 사실을 통보했음.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징후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사안은 한국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中 엔지서 탈북자 돕던 한국인 2명 체포돼”>(3/12, 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 엔지(延吉)에서 최근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던 탈북자 출신 한국인 2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지원활동을 해온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9일 탈북자 출신 한국인 2명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들과 함께 있던 탈북자 8명도 체포된 뒤 투먼(圖門)의 감옥에 옮겨져 복송될 위기에 처했



다"고 말했다.

-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 5명은 20대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이고 한국인 2명은 모두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옌지에서 체포한 우리 국민 2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인데 이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朴대통령, 시진핑 신임 중국국가주석에게 축전>(3/14,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발송했다. 박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및 한반도·동북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박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박 대통령의 당선 및 취임 축하 메시지를 3차례 전달한 바 있음.
- 대선일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0일 장신썬(張愼<金 3개>森) 주한중국대사를 통해 축전을 전했으며, 지난 1월10일 특사인 장즈쥘(張志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당선 축하 구두메시지를 전달한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취임식 특별대표인 류연둥(劉延東) 공산당 정치국원을 통해 취임 축하서한을 보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05년 7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당시 방한 중인 시진핑 당시 저장성 당서기와 만난 바 있음.

다. 한·일 관계

● <한국·일본 유엔서 '위안부 법적 책임' 공방>(3/12,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11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유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날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신동의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성폭력에 시달린 여성들의 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설명.
- 그러자 야마자키 준(山崎純) 일본대표부 대사는 답변권 행사를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필설로 다하기 어려울 만큼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서도 "단지 이를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법적 책임은 남아있다"고 반박하자 일본 측은 "한일간의 전쟁 배상 등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 <윤외교 "日, 바른 인식으로 과거사 지혜롭게 다뤄야">(3/14,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일본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윤 장관은 "일본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양국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시다 외무상은 "중요한 이웃인 양국이 과거를 잘 인식하면서 국민 교류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윤 장관의 취임을 축하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가까운 시일 내 윤 장관의 일본 방문을 초청했다.
 - 두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이보다 앞서 열릴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북한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통화는 일본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라. 미·중 관계

- <"미국 합참의장 내달 중국 방문">(3/13, 연합뉴스)
 -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내달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미국 합참의장의 방중은 2011년 7월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이후 1년9개월 만임. 뎀프시 합참의장과 팡펑후이(房峰輝)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12일 핫라인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
 - 뎀프시 합참의장은 방중 기간에 군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중국 함대의 올해 림팩(황태평양군사훈련) 참가 등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할 예정. 신화통신에 따르면 팡 총참모장은 이날 통화에서 평등과 상호존중, 상호승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군사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과 공동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미군과의 상호신뢰 강화, 이견의 적절한 처리, 협력 강화를 위해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뎀프시 합참의장은 자신의 직무상 가장 주요한 임무중 하나가 중국과의 굳건한 군사관계를 선설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지역안보, 군사교류 등의 분야에서 중국 측과 적극적으로 의사 교환하겠다고 화답. 신화통신은 두 사람이 주요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의사교환을 했다고 전해 한반도 상황, 중·일관계, 대만무기 판매 등이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 이와 관련, 일본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은 뎀프시 합참의장이 방중 기간에 중국 당·정 요인들을 만나 미·중간 사이버 공격 의혹이나 중·일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미국, '중국 끌어안기'행보...북핵 해결 '협력' 타진>(3/15, 연합뉴스)

- 미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선출에 맞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모양새.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중국은 그간 북한의 붕괴를 우려해 북한의 잘못을 계속 참아왔지만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G2(주요2개국) 상대국'인 중국의 외교행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이른바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밝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임기 출발과 함께 핵심 파트너로 중국을 상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읽힘. 특히, 지난 20년의 '북핵 역사'의 반복을 피하고자 미국이 향후 대북정책을 놓고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
- 오바마 대통령은 14일에도 중국을 향해 적극적인 손짓을 했음.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중국의 지도자로 우뚝 선 시진핑을 향해 축하와 동시에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음. 그러면서 잭 루 미국 상무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을 내주와 내달 중으로 중국에 보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음. 경제와 외교를 책임진 두 장관을 베이징(北京)으로 직접 보내겠다는 얘기였음.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현안을 놓고 앞으로 중국과의 협의를 필수과정으로 상정하겠다는 발표와 다름없다고 외교가는 받아들이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간절함을 다시 한 번 역설했음. 향후 중국의 대응이 주목됨. 중국은 시진핑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제1의 외교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권력 공고화 과정을 거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는 북중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외교 흐름과도 연결되는 중대사안임.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혈맹인 중국의 태도에 따라 핵개발은 물론 체제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몰릴 수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국 견인 행보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미묘한 틈을 활용해보겠다는 의지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피를 나눈 유대감'은 여전히 공고. 대표적으로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부주석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리위안차오(李源朝)이 있음.
- 장쑤성 창저우(常州)에서 태어나 상하이 푸단대학을 졸업한 그는 중국 정계의 양대 세력인 태자당과 공청단 사이를 연결할 핵심인물로 꼽히는데, 그의 부친은 상하이 부시장을 지낸 리간칭(李干城)임. 1950년 태어



난 리위안차오의 본명은 '리원조'임. 중국이 '항미원조전쟁(미국에 항거하고 조선<북한>을 돕는 전쟁)'이라 부르는 한국전쟁 때 태어난 것을 염두에 두고 그의 부친이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음.

- 중국 권부에서 그의 독특한 존재감 때문에 앞으로 그의 역할이 시진핑 체제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임. 특히 그가 맡은 국가부주석은 홍콩·마카오 업무를 총괄하는 홍콩·마카오공작협력소조 조장과 외교·안보 정책 입안 기구인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부조장을 겸임할 가능성이 큼. 중국의 외교분야에서 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 숙명적으로 '북한에 대한 형제애'를 가진 리위안차오의 존재는 앞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세계 질서를 가늠할 핵심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북한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셈임.

마. 미·일 관계

● <오키나와 어민, 후텐마 기지 이전 예정지 매립 동의>(3/12,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縄) 어민들의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 이전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어업협동조합은 11일 비공개 임시총회를 열어 일본 정부가 요청한 헤노코(邊野古) 연안 부 매립에 동의하기로 결정. 조합원 96명 중 88명이 찬성했음. 헤노코는 후텐마 기지 이전 예정지이고, 나고어협에는 헤노코 지역 어민들이 속해 있음.
- 일본 정부는 헤노코 지역 어민들의 동의를 근거로 이달 안에 허가권을 갖고 있는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 지사에게 매립을 신청하는 등 기지 이전을 서두를 예정임.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8~10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나카이마 지사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서 '현실론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오키나와현 내 기지 이전에는) 오키나와 전체가 반대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어 헤노코 연안 매립에 동의할지는 불투명
-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6년 오키나와 기노완(宜野灣)시의 후텐마 미 해병대 비행장을 2014년까지 나고시 헤노코로 옮긴다는데 합의했지만 이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좀처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음.

● <"일본, 15일 TPPA교섭 참가 정식 표명">(3/13, 로이터통신)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에 참가한다는 방침을 정식 표명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음. 일본 정부가 TPPA 교섭 참가를 선언하면 90일간의 미국 의회 승인절차와 5월의 TPPA 참가 선행 11개국 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의 TPPA 참가국 회의 때부터 일본이 TPPA에 참가. 일본은 그



- 동안 자동차 분야 관세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사전 협의를 벌여왔음.
- 이와 관련,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양보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는 쌀 등 농산품의 관세 유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임. 하지만 이러한 마일 2국간 사전협약에 대해 13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된 TPPA 확대회의에서는 일부 선형 참가국들이 일부 농산품 등을 관세 철폐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됨. 일본이 TPPA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TPPA 선형 참가국들의 승인이 필요. 일본의 TPPA 교섭 참가에 대해서는 국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 12일에는 농업단체 관계자 등 4천여 명이 도쿄에서 반대집회를 가졌음. 한편, 아베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TPPA 교섭참가 필요성 등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

바. 미·러 관계

- <"미국, 유럽 MD 축소 계획 러시아와 논의 착수">(3/17, 연합뉴스)
 - 미국이 러시아와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 계획 축소와 관련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가 16일(현지시간) 밝혔음.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척 헤이글(미국) 국방장관이 유럽 MD 계획 축소를 발표한 뒤 러시아 정부와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 헤이글 장관은 하루 전 예상보다 빨리 진전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던 유럽 MD 계획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미국은 그러나 유럽 MD 계획 변경에 대해 사전에 러시아와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러시아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 미국은 그러면서도 유럽 MD 시스템이 배치될 예정인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는 계획 축소에 대해 미리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음.
 - 러시아는 아직 미국의 유럽 MD 계획 축소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애초 4단계로 나눠 유럽 MD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었음. 먼저 1단계로 2011년까지 지중해에 요격미사일 SM-3으로 무장한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터키에 MD 운용을 위한 레이더 기지를 건설. 2단계는 2015년까지 루마니아에 SM-3 요격미사일 부대를, 3단계는 2018년까지 폴란드에 같은 부대를 배치하는 것이었음. 마지막 4단계는 2020년대 초까지 유럽 지역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격추할 수 있는 첨단 요격미사일 'SM-3 2B'로 교체한다는 구상
 - 미국은 그러나 커져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본격 대처하기 위해 유럽 MD 계획의 마지막 4단계를 포기하기로 했음. 여기서 남은 예산으로 알래스카에 요격 미사일 14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일본에 미사일 추적



기지를 설치함으로써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기로 했음. 한편, 일부에선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러-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온 유럽 MD 협상이 극적 타결을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음.

사. 중·일 관계

- <중국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방일 돌연 연기>(3/12, 연합뉴스)
 - 중국 정부 내의 대표적 일본통으로 꼽히는 탕자쉬안(唐家璇·75)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이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 방문을 연기했다고 양국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12일(현지시간) 밝혔음.
 - 탕 전 국무위원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했던 방일 기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탕 전 국무위원이 이달 하순 방일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보도
- <중국, 일본 대지진 추도식 불참...양국 신경전>(3/12, 연합뉴스)
 - 11일 도쿄에서 열린 동일본 대지진 2주기 추도식 행사에 중국측 외교사절이 불참한 것을 놓고 양국이 공방을 벌였음. 중국은 애초 추도식에 외교사절을 보내기로 했다가 일본이 국가나 단체를 호명하는 '지명 헌화' 대상에 대만을 포함하데 반발해 결국 불참
 -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당일 담화를 통해 대만을 지명 헌화 대상에 포함하데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2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획책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든 반대한다"고 밝혔음. 정치적 이유로 추도식을 보이콧했음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임.
 - 그러자 일본도 발끈했음.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중국 추도 사절의 불참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고 이스럽다"고 밝혔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중국으로부터 지명 헌화 대상에 대만을 추가한 것 때문에 추도 사절을 보내지 않는다는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중국과 대만은 불가분의 영토라는 중국 입장을 변함없이 존중한다고 설명했지만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기시다 외무상은 이어 지명 헌화 대상에 대만을 추가한 배경에 언급, "지진피해에 대해 (대만으로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받았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이 12일 오전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 영해에 6일 만에 다시 진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한편, 한국도 대지진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이에 대해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는 11일 밤 가와이 지카오(河相周夫)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연락해 "사무적 실수로, 불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총서기에 축전>(3/14,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중국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아베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 주석으로 선출된 시 주석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축전을 보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회견에서 "새로운 지도자와 지도부에 축의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음.
 - 중국과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일본은 시 주석 체제 하에서 중국의 대일 강경 자세가 변함없이 유지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음. 일본 매체들은 현재의 양국 관계로 미뤄 아베 총리와 시 주석간의 첫 대면은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때 성사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음.
 - 아베 총리와 리커창(李克強) 중국 신임 총리가 참석하는 5월 한중일 정상회담(한국 개최)에서도 중국이 센카쿠 문제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중일 양자 회담을 피할 수 있다는 예측이 일본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日총리, 도쿄 전범 재판에 의혹 제기...中입장 밝혀>(3/14, 인민일보)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내린 일본 전범 판결(도쿄 판결)에 대한 정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쟁의 총괄은 일본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 측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가 이뤄졌다"라고 밝혔음.
 - 일본 내 지각 있는 인사와 한국 학자들은 "아베의 이 같은 발언은 2차 대전 후의 국제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로 국제사회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조짐에 반드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3일 "역사는 뒤바뀔 수 없고, 정의 또한 도전 받을 수 없다"며, "역사가 이미 역사를 존중할 때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증명했고, 일본은 역사에 대한 직시와 깊은 반성만이 아시아 이웃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

아. 중·러 관계

- <중국, 자국 위성 파편 러시아 위성 충돌 부인>(3/12, 연합뉴스)
 - 중국이 자국의 위성 요격 실험 탓에 러시아 위성이 고장 났다는 미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음.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주 공간 내 파편들은 오랫동안 우주 활동으로 인한 역사적 문제로 누구의 파편이 가장 많은지는 국제 사회의 공통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 화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봤지만 이런 주장은 비전문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월 중국 평원



(風雲) 1C 기상위성의 우주 파편이 러시아 블리블리츠(BLITS) 과학위성과 부딪히면서 러시아 위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미국 우주표준혁신센터(CSSI)의 T. S. 케이소 천체 역학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임.

- 중국은 지난 2007년 수명이 다한 평원 1C 기상위성을 상대로 인공위성 요격미사일(ASAT) 실험을 해 우주 공간에 파편 3천여 개가 생겨났음.

●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선출 전화로 축하”(3/14,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주석에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음. 크렘린궁 공보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 총서기에게 전화를 걸어 주석 선출을 축하하면서 앞으로의 성공적 직무 수행을 기원했음.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추가적 협력 확대와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강화에 대한 기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양국 정상은 또 개인적 교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조만간 있을 시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크렘린궁은 덧붙였다.
-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시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한 바 있음.

● <중·러 6자 대표, 北 핵실험 등 한반도 정세 협의>(3/15,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한반도 정세에 관해 협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발표했다. 외무부는 이날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 핵실험 강행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결의 2094호 채택에 따른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 외무부는 "양측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핵무기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을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자. 기. 타

● <대만·일본, 어업회담 재개 준비 접촉>(3/12, 연합뉴스)

- 대만과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으로 중단된 어업회담을 복원하기 위한 당국자 접촉에 다시 나설 예정. 대만 외교부는 양국 간 어업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이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음.
- 양측은 지난해 11월 말에도 한차례 만났으나 센카쿠 영유권 문제가 거듭 불거지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음. 대만 당국은 이번 예비회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룰 경우 이르면 내달 중 공식 어업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일본은 센카쿠 분쟁에서 중국과 대만이 공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만과의 어업회담을 서둘렀음.

- 대만도 지난달 센카쿠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공동 대응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어업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 zu 주력. 이번 예비회담은 공식 회담에서 다룰 의제 설정이 핵심 안건인 것으로 전해졌음.
- 양국 간 어업회담이 재개되면 2009년 2월 이후 4년여 만에 센카쿠 주변 어업권 협상 채널이 복원되는 것임. 일본과 대만은 센카쿠 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이 일대의 어업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음.

● <아베, 헌법 9조 개정 속내 비쳤다 '후폭풍'>(3/12,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헌법 제 9조의 개정을 거론했다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음.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BS아사히 방송에 출연, 유엔군 참여 가능성에 대비해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음.
- 아베 총리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설명했을 뿐"이라며 한발짝 물러서면서도 "처음부터 (유엔군 파견 등을 통한 집단안보 참여) 책임을 배제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며 '소신'을 재확인했음.
- 그간 개헌과 관련, 아베 총리를 포함한 자민당 인사들은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는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 자주 언급했지만 민감한 9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음.
-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행사 포기, 교전권 불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9조를 바꾸는 일은 자민당의 '숙원'이지만 일본 전후 체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인 만큼 '안전운행' 차원에서 우선 96조부터 개정하자는 게 당내 공감대였음. 따라서 이번 헌법 9조 관련 언급은 최근 지지율 70% 수준을 찍으며 자신감을 얻은 아베 총리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음.
- 이에 대해 당 인원에서 적지 않은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자민당 간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월 참의원 선거까지는 겸허하게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지적.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집단안전보장 참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다. 폭넓게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견을 냈음.
-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도 "헌법 9조를 바꿔선 안된다"고 명확히 밝힌데 이어 10일 9조 개정은 "국민 의식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음. 개헌을 두고 자민당이 신생 우파정당 일본유신회와의 선거 공조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BS아사히에 출연해 '헌법 9조 발언'을 한 뒤 나카다 히로시(中田宏),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등 유신회 소속 중의원들과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다고 함. 또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유신회 공동대표는 11일 "헌법 9조가 지금 그대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국제 정세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에 맞장구를 쳤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